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당진으로  
을지로 위원회는 성수동으로  
간 까닭은?

##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공존... 상생 에너지로 힘찬 '당진'

장관으로 첫 현장소통 위해 방문  
신선식품-상인, 공산품-노브랜드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 효과 노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엔 충남 당진으로 달려갔다. 당진은 박 장관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지역구이긴 하지만 이날 행보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찾은 발 걸음이다. 지난 8일 취임하면서 박 장관이 중기부의 정책 철학으로 강조한 '상생과 공존'의 모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 장관은 당진전통시장과 이마트 노브랜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연합뉴스

가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생스토어를 함께 찾았다.

박 장관은 이날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면서 "전국 시장 최초로 대기업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

는' 당진전통시장에서 장관으로서 첫 정책 현장 소통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서왔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경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이 찾은 당진전통시장은 지난해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시장은 2016년 전국 전통시장 최초로 대형마트인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 상생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 인근 1km 이

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과 판매상품을 달리하는 등 전통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신선식품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팔고, 시장에 없는 공산품은 노브랜드가 파는 등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또 전통시장은 5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날마다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시장 내에는 고객센터와 수유실, 장난감도서관 등도 갖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도 극대화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 사람이 몰렸고, 빈 곳이 많았던 시장 곳곳에도 점포가 새로 들어서는 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당진전통시장과 대형 유

통사와의 상생협력사례는 골목상권에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면서 "상생협력은 대형 유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 시키는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진전통시장이 이마트 노브랜드와 만난 이후 시장 매출액은 연간 10% 이상 상승하고, 주차장 이용객도 약 54% 늘어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앞서 취임식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30만원짜리 구두 만들기도 7000원 받는 '제화공의 눈물'

기형적 수제화 산업구조가 '문제' 수수료 줄여 한푼이라도 확보해야

제화공이 30만원짜리 구두 한켠레를 만들어도 7000원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12시간 일해서 열두켠레를 만들어도 순수입은 8만원이다.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셈이다. 왜 그럴까.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제화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이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백화점과 홈쇼핑 등 대형유통사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서울 성동구 성수수제화거리에서 '불공정 유통수수료 개선과 수제화 산업 상



서울 성동구 성수수제화거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불공정 유통수수료 개선과 수제화 산업 상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배한님 기자

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11일 열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성수수제화협회, 제화노동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수제화 거리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을지로위원회는 백화점과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라고 주장했다. 원청과 하청, 제화공 모두 낮은 수익을 나누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다.

평균적으로 30만원짜리 수제화를 팔면 대형유통사가 40%인 12만원을, 브랜드사인 원청이 41%를 가져간다. 수제화에 부과되는 40% 수준의 수수료는 유통업계에서 다루는 상품 중 최고 수준이다. 수제화 유통 수수료는 백화점 35%, 홈쇼핑 41%로 책정돼 있다. 반면,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이 제조하는 가전제품이나 디지털 기기의 경우 유통 수수료가 백화점에서는 15%, 홈쇼핑에서는 31%에 불과하다.

원청은 원청대로 백화점 등 매장 인테리어와 물류비용 등 비용을 소모하고 나면 순이익 비중이 작다. 백화점과 홈쇼핑 판로개척 등 영업관리비가 증가하면서 순이익률이 3%대로 떨어

졌다. 소다와 미소페 등의 지난해 순이익률은 각각 3.7%, 3.9%였다.

유통사와 원청이 가져가고 남은 19% 중 17%인 5만1000원을 하청 공장이 가져간다. 남은 2% 남짓인 7000원이 제화공에게 떨어진다. 이마저도 지난 20년간 동결되던 것이 작년 4월 제화공들 파업을 통해 6000원에서 10000원 인상된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원하청, 제화공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길은 유통 수수료 인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에서의 수수료가 잡화평균인 31.4%로 3%만 낮아져도 한 켠레당 9000원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만원짜리(구두)가 제화공에게는 7000원 정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며 기형적인 수제화 산업구조 문제를 꼬집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중기부·유관기관, 산불 피해社 '특별조치'

특별긴급경영안정자금 편성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215곳으로 집계(10일 기준)된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나서 특별자금을 편성, 재기를 돕기 위해 나섰다.

특히 대출 한도와 기간을 늘려 피해자들이 좀더 많이 활용하고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금리 부담도 낮췄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긴

급경영안정자금은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3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7년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별자금은 1조27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자금은 연2%의 고정금리로 부담을 줄였다. 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은 대출한도가 7000만원, 2년 거치를 포함한 대출기간이 5년이였다. 이번 산불 피해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하게 한도와 기간을 늘린 것이다. /김승호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일 강원 산불피해 지역을 찾아 속초시 장사동의 한 유통업체를 방문, 업체 사장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웅진코웨이 춘천 취약계층에 '깨끗한 물' 나눈다

웅진코웨이가 강원도 춘천에서 '건강한 물' 전파에 나섰다.

웅진코웨이는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 사회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수기 지원 사업'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깨끗한 식수 환경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한 이번 제휴를 통해 웅진코웨이는 춘천의 상수도 미 보급 지역 내 지하수 수질이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정에 자사의 시

루(CIROO)필터가 탑재된 정수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2개월에 한번 방문해 필터 교체 등 관리 서비스를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안심 지하수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지하수 오염지역의 주민들에게 정수기 500여대를 무상 지원했다. 또한 충청남도 내 지하수 수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년 100대의 정수기 및 5년 무상 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